

‘청년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청년정치쿠루 대표



‘청년 정책’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10년대 들어서부터다. 시작은 등록금이었다. 2000년대 당시 대학 등록금이 가파르게 오르며 청년층의 분노가 고조됐다. 이를 달래기 위해 ‘반값 등록금’과 같은 공약이 등장했다. 차제에 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20~30대가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게 요지였다. 2013년 서울을 필두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의 참여 기구들이 설립됐다. 덕분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

시간과 경험의 축적은 청년 정책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구직 준비 비용이나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 기본. 어떤 지자체는 지역으로 전입해 온 청년들을 위해 각종 생활품이 담긴 ‘웰컴 키트’를 제공하거나 하녀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없는 정책이 없다. 오랜 기간 수많은 청년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제안해 온 결과다.

요즘은 청년을 겨냥한 정책으로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

다. 청년 정책 고도화의 역설이다. 선거가 임박하면 후보자들은 2030 표심을 잡겠다며 일자리를 몇 개 만들고 주택을 몇 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낸다. 저가 실현 가능한가 싶은 의구심은 둘째로 치더라도, 공약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 차 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정책이 제안된 경우가 태반이다. 웬만한 공약으로 신선한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 다수가 제값하지 못한다는 이유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역세권 청년주택 보급을 확대한다고 한들 대상에 선정되려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만 한다.

구직 준비·월세 보증금·연애 알선 말 그대로 없는 정책이 없다
문제는 땀길 정책 아닌 사회구조
일자리·주거 개혁 후보에 표 줄 것

청년 정책이라는 건 임시방편인 측면이 있다. 일자리·주거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는 보통 사회구조적인 데에서 비롯된다. 구조를 바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구조 개혁에는 강한 반발이 뒤따른다. 그 반발이 두려워 사회의 본질에는 손대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시혜성 정책으로 적당히 땀길하고 있는 게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청년 정책의 현주소다. 당사자들은 안다. 오늘 받는 지원금은 내일의 빛이라는 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내버려둔 채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고서 집값을 잡겠다

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도.

독일 유튜브 채널 쿤스트게작트의 ‘대한민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 영상이 청년층에서 큰 화제를 모은 건 의 미심장한 일이다. 영상에는 극단적인 인구 절벽에 직면해 한국 사회가 경제·문화·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쇠퇴하게 될 거란 내용이 담겼다. 2030세대에선 이 나라가 정쟁에 매몰돼 반동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내리막길을 걷게 되리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갤럽은 4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국정 우선 과제’를 물었다. 모든 집단이 1순위로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하지만 그다음은 세대, 이념에 따라 판이하게 나뉘었다. 20대 이하는 ‘저출생 대책’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응답자 비율은 14%. ‘계엄 세력 척결(2%)’ ‘검찰 개혁(1%)’을 요구하는 목소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진보적인 유권자, 혹은 그런 성향이 강한 40~50대에서는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는 여론이 훨씬 우세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닥쳤지만 2030세대 표심은 여전히 방향 중이다. 어떤 조사에서는 20대 절반이 선호하는 후보가 없는 걸로 나온다.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온갖 청년 정책을 내놓는 건 큰 의미 없다. 우리 사회의 병폐를 구조부터 뜯어고치겠다는 사람, 대한민국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인물에게 청년들은 표로 화답할 것이다.



미켈란젤로, 도니 톤도, 1507년경. 목판에 유채와 템페라, 직경 120cm.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소장.

앙을 실천했지만, 복음서를 아무리 살펴도 뭐다 길게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버이날을 앞두고 ‘도니 톤도’를 다시 보니 낯은 아버지가 아닌, ‘선택된 아버지’로서 묵묵히 역할을 다했던 요셉이 유난히 크게 보인다. 어쩌면 도니는 요셉처럼 혈통과 권위가 아닌 책임과 헌신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포스트텍스 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80]

미켈란젤로의 원형 그림

‘도니 톤도’는 미켈란젤로(Michelangelo·1475~1564)가 목판에 그린 그림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완성작이다. 피렌체의 모직물 상인 아놀로 도니가 주문한 ‘톤도’다. 톤도는 ‘둥근’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로토ondo(rotondo)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원형 예술 작품을 지칭한다. 이 작품이 ‘도니 톤도’라고 불리는 건 도니가 주문한 원형 그림이기 때문이다.

1504년 도니는 피렌체의 유서 깊은 귀족 스트로치가(家)의 여인과 결혼했다. 도니 집안 또한 부유했다. 그러나 스트로치가의 정치력과 문화적 수준에 비교하면 여러모로 기우는 신흥 부자에 불과했다. 첫아이를 낳았을 무렵 미켈란젤로에게 성가족(聖家族)을 주제로 한 ‘도니 톤도’를 주문한 것은 도니의 사

회적 지위와 예술적 취향이 여느 귀족 못지않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성가족이란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다. 그림 속에서 요셉은 마치 권좌처럼 굳건하게 마리아의 등을 받치고 앉아서 풀밭에서 책을 읽던 그녀에게 조심스레 아기 예수를 안아 건넨다.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니, 요셉은 그저 마리아의 남편일 뿐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녀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아기 예수를 헤롯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피신을 감행했다. 이처럼 요셉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들었을 헌신과 신

社 説

재판 미루라며 탄핵 협박하는 민주당, 사법부도 통제하나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공개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 기일을 15일로 지정했는데, 이를 포함해 6월 3일 대선일까지 예정된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출석을 대선 후로 미뤄 달라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공판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탄핵에 돌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입법부에 국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 사법 쿠데타가 진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답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여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법원이 거부하면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선 당일까지 5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의한 사실상의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 공판 기일이 13일과 27일로 잡혀 있고 위증 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20일, 결심 공판이 6월 3일에 예

정돼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 갑자기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 책임이 법원에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민주당이 “고등법원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다”고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2022년 9월 검찰의 기소 이후 이미 2년 7개월이 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내에 2·3심 선고를 하라는 법이 지켜졌다면 이미 진작에 결론이 나야 할 사건이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재판을 진행시킨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앞으로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판사의 탄핵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은 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대해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인데 법원이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이 무리하고 부당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 생각이 엇갈릴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여긴다면 이것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다.

후보 주변은 단일화 신경전, 탈락자들은 외면, 열세 여권의 풍경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5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서 만났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오늘 중만 나자고 세 번쯤 말했다”고 했고, 김 후보는 “그냥 말씀만 들었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양측 모두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예견된 단일화 협상이라 하더라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날 양측 진영에서 오간 말들은 신경전 그 이상이었다. 김문수 후보 측 관계자들은 “본선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며, 한 후보를 향해선 “우리 당에 1000원짜리 당비 하나 내리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한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며 양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후보 단일화 문제로 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의원총회까지 열렸다.

김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입장문을 내고 “단일화는 국민의힘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당내 경쟁을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다. 그가 단일화에 나서려면 자신과 주변의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결단을 해야 한다.

국정 그늘 쟁기라는 ‘대통령 특활비’, 여사들 특별활동에 쓰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무속인 ‘건진 범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씨로부터 압수한 ‘관봉권’ 돈다발 5000만원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납품한 신권이거나 한국은행이 상태가 좋은 구권을 선별해 시중은행에 공급한 돈문지를 말한다. 전씨 집에서 압수된 관봉권의 출처는 대통령실에 특활비 용도의 현금을 제공해온 한국은행 강남본부로 확인됐다. 압수 관봉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 날짜가 찍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역시 의상 구입을 위해 최소 1200만원의 관봉권 현금을 사용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 여사가 구매한 의료 및 장신구는 4억원에 가깝다고 추산되는데 확인된 금액은 약 1억원이라고 한다.

특활비는 국가재정법 44조에 의거해 ‘정부의 특수한 활동에 지원되는 비용’이다. 대통령실의 경우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에 연간 150억원 안팎이 배정되고 있다. 대개 대통령이 각종 유공자에게 주는 금일봉, 격려금, 축의금, 조의금, 전별금 등이 특활비에서 나온다. 공식적인 예산 항목으로 잡기는 애매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그늘진 곳을 쟁기라는 취지로 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수증이나 특별한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쌈짓돈’이라 권력 실세의 사적 유용, 불법 전용 가능성이 늘 논란거리가 돼 왔다. 대통령 부인의 부적절한 외부 접촉이나 무분별한 의상 구입에 사용하라는 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감사원이 특활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두 김 여사의 씀씀이 의혹에서 보듯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권력 기관 특활비에 대한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문수 후보가 주의할 두 가지 ⚠

① 국힘 뜻뜻미지근 쌍권총 지도부 다루기

② 대통령 상습 탄핵 전문 언론 대응법

《배신자/기회주의자/탄핵파》와 싸울 필요 없지만

간담어·몸값 키워주고 올려주어선 안돼

상업 언론과 척지하지 않지만, 휘둘리지도 않는 지혜 구사



▲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권영세 권성동. 쌍권1현은 탄핵 어정평파와 찬성파. 이들을 내칠 필요도 없지만, 응석·어려움 생때 옹니에 골라다 날 이유도 없다. © 이종현 기자

국힘의 문제점

김문수 전 장관을 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국민의힘은 지금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문수와 한동훈의 당내 득표율은 6대 4였다.

국민의힘 당원의 40%가 한동훈을 찍은 꼴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도 찬성했다는 뜻도 된다. 4강 선출 때 나경원을 떨어뜨리고 안철수를 뽑았다. 2강 선출 때 홍준표를 떨어뜨리고 한동훈을 뽑았다.

이런 점을 돌아보면 국민의힘 약 절반은 《투철한 자유-보수 우파》라기보다는 《어중간한 화색》이라 봐도 크게 잘못이 아닐 것이다.

김문수 캠프의 뇌수(腦髓)는?

자유 국민이 《이런 뜻뜻미지근하고 어정평한 국민의힘》을 주력군이랍시고 믿고 6.3 사생결단에서 이길 것을 기약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당장 무엇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환골탈태하겠다”라 선언했다. 중기적 계획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도, 아니 지금 시점이기에도 더욱, 당의 태세를 획기적으로 쇄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김문수 캠프의 뇌수(腦髓)》부분만이라도 《쌍권총 국민 의힘》과는 확실하게 다른 성격으로 확 바뀌어야만 한다. 《주적(主敵) = 극좌 & 기회주의자》의 본질과 전략·전술을 원히 꿰뚫어 보는 좌파 《임자》들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맹물·얼치기 쌍권총, 총알 없어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적의 정제》조차 잘 모른다. 그저 《좀 진보적》이려니 생각할 따름이다. 한심한 맹물들이다.

이런 얼치기들이 이 시대 치열한 사상전을 이끌어? 말도 안 된다. 어림 반 톤이도 없다.

《광범위한 대연합》을 이루기 위한 정치 협상 담당으로, 《교섭과 담판에 능하고 정치력 있는 인물들》을 배치해야 한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김문수 후보는 지금 《적군과 아군을 어떻게 가르느냐》의 중대한 분별의 순간에 와 있다. 《주적 이재명》을 막기 위해 선 누구와도, 특히 한덕수와 연대해야 할 때다.

그러나 내부의 《배신자/기회주의자/탄핵파》가 이 연대에 호의적일지는 극히 의심적이다. 이들에게는 어찌 대처할 것인가?

그들과 굳이 싸움을 만들어서 할 것까진, 없다. 그렇다고 과학계 대접해서 《간담어와 몸값》을 키워주고 올려줘서도 안 된다.

《상습적 대통령 탄핵 전문 언론》에는 더더군다나 낯이고 잡혀선 안 된다. 그들은 역대 대통령을 《자기 뜻대로》 써 먹으려 했다. 이게 잘 안 되면 탄핵에 탄핵이 이어졌고

김문수 캠프는 이제 비로소 《투쟁 & 정치 & 미디어》의 복합구조를 체험할 것이다. 그 세계는 교활하다. 정글이다. 이겨내야 한다.

1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5월 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52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